

KMI 동향분석

VOL.93
2018 JULY

발간년월 2018년 7월(통권 제93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박광서 혁신성장연구실 실장
(kspark@kmi.re.kr/051-797-4722)

박예나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yena719@kmi.re.kr/051-797-4763)

이정민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min@kmi.re.kr/051-797-4769)

이지원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원
(jiwon@kmi.re.kr/051-797-4799)

정책펀드는 정부가 주도하여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혁신 창업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데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투자유치를 받은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약 5배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펀드를 확대하고 '제2의 벤처 붐' 재현에 나섰다.

그러나 해양 분야는 정책펀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정책펀드인 한국모태펀드에는 문화, 관광, 스포츠, 교육, 환경 등 13개의 계정이 있으나 해양계정은 없다. 즉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5년간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해양기업은 22개로 전체 투자유치 기업의 0.4%에 불과하다.

OECD(2016)에 따르면 2010~2030년 동안 세계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2배로 성장하고, 고용증가율은 전체 산업을 능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신산업은 2017~2030년 동안 연평균성장률이 8.5%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해양펀드를 운용하는 등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은 최근 들어 극심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한진해운 사태의 여파로 2016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 매출액, 상용근로자 수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창업 7년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 산업의 경우 51.7%인데 비해 해양 분야는 33.3%로 창업도 부진하다. 해양기업의 98.7%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영세하다 보니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것마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에 18개 벤처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양수산투자기관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최근 들어 해양산업에 대한 벤처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술혁신형 해양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용펀드 조성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기업들 역시 펀드를 통해 투자유치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500개 해양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40%에 달하고, 투자유치 희망 기업의 평균 투자규모도 약 23억 원에 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모태펀드 내에 향후 5년간 정부 출자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420억 원 규모의 해양계정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출자금 확보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해양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써 기능해 왔다. 세계 6위 무역대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해운과 항만이었고, 수산은 국민 먹거리와 100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해양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할 때다. 해양신산업 분야는 세계 시장을 선점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해양과학기술을 확보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따라잡기’에서 ‘뛰어넘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이야말로 기술기반의 해양벤처기업 육성과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정책펀드는 벤처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정책펀드는 정부 자금을 투입해 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

- 정책펀드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 및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며 정부 인가를 받은 운용기관을 통하여 운용함
- 국내외적으로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국내의 주요 정책펀드로는 한국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신산업 육성펀드 등이 있음
- 특히 한국모태펀드와 농수산물식품모태펀드는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상위의 펀드임(Fund of Funds)

표 1. 국내에서 현재 운용중인 주요 정책펀드 현황

구분	특징
한국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기술 보유 중소벤처 기업에 안정적 자금 지원 목적으로 특허 기술 사업화 추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5년부터 30년간 운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의 공적 출자자들이 벤처캐피탈 등의 조합출자자를 통하여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주)가 운용 · 현재 12개의 주요 계정을 통하여 운영(중진, 엔젤, 지방계정 등)
농림수산물식품 모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시장의 금융지원의 강화와 민관 합작 방식의 투자를 통한 농식품 경영체의 기업화의 목적을 가지고 2010년 설립(농림수산물식품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에 근거) · 투자대상은 농어업, 식품산업, 소재 및 생산설비산업, 농림수산물 관련 산업에 한정
성장사다리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생태계 촉진을 위하여 창업, 성장, 회수 등 성장단계별로 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3개 기관의 정책자금과 민간 투자자금을 모아 향후 3년간 1.85조 원 규모 조성 예정 펀드 · 2016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출범한 이후 성장사다리펀드를 전담해 독립적 운용 · 창업단계→성장단계→회수·재도전 단계의 주기로 72개의 하위 펀드가 운영되고 있음(2017. 8월 기준)
신산업 육성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 핵심기술 투자를 위하여 3,000억 원 규모 정책펀드 조성 · 12대 신산업 부문에 투자(전기·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사물인터넷 가전 등) · 산업부와 KDB 산업은행,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부와 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이며,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추어 총 1,0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펀드와 2,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로 조성

자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 분야 정책펀드 조성 관련 조선해양기업 수요조사 결과, 2018

■ 펀드를 통한 벤처투자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최근 5년 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2만 8,13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투자유치를 받은 벤처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하여 약 5배 높은 고용증가율을 나타냄
- 2017년 기준으로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들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83.4%, 청년 창업 기업들도 51.9%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투자유치의 일자리 창출 공헌도가 매우 큼
- 투자 규모가 클수록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펀드를 통한 자금 투자 확대가 필요함^{1) 2)}

표 2.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성과(2013~2017년)

(단위 : 개사, 억 원, 명)

투자연도	투자기업 수	투자금액	투자 전년도 고용	2017년 말 고용	고용증감(명)	연평균증가율
2013	547	11,009	20,889	24,698	3,809	3.4%
2014	479	12,083	15,029	21,810	6,781	9.8%
2015	538	15,742	15,315	24,000	8,685	16.2%
2016	556	17,265	13,175	18,843	5,668	19.6%
2017	529	18,597	14,657	17,848	3,191	21.8%
합계	2,649	74,696	79,065	107,199	28,134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03.16.)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책펀드 확대 추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벤처 붐’이 일었으나 글로벌 IT 버블 붕괴 이후 2002년부터 정체 지속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경제로부터 벤처경제로의 이행’을 산업 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정부 정책을 통하여 벤처 생태계를 조성함³⁾
- 2000년대 벤처 붐은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설 및 1997년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의 수는 1999~2001년에 크게 증가함
- 그 후 글로벌 IT 버블 붕괴 이후 2002년부터 근시안적 투자 과열 현상으로 벤처투자 수익 실현 부진으로 인한 정체가 장기화됨⁴⁾

1) 김건우, 서병철, 벤처캐피탈의 자금투자가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0

2) 박정서, 윤병섭, 한국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투자 성과 분석, 2012

3) 백훈, 역대 벤처기업 육성정책 비교연구, 2012

4) 산업연구원, 벤처 진단 및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KIET 산업경제, 2016

그림 1. 연도별 벤처기업 수 및 매출액 현황



자료: e-나라지표

■ 모태펀드 조성은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

- 정부의 벤처캐피탈 정책은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인하여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더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벤처캐피탈 시장 및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⁵⁾
- 벤처기업의 수는 모태펀드 조성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3.5배 증가하였으며, 금액도 2배 이상 증가해 정부의 모태펀드 조성이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 모태펀드 조성 전후 벤처시장 변화

(단위: 개, 억 원, 배)

구분	모태펀드 조성 전 (2004년 말)	모태펀드 조성 후 (2012년 말)	조성 후/조성 전
벤처기업 수	7,967	28,193	3.54
신규 벤처투자 규모	6,044	12,333	2.04

자료 : 중소기업청 제출자료(2014) 및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실태 분석(송원근, 2014)

5) 김종민, 국내정부 벤처캐피탈의 정책효과분석, 2016

■ 정부는 ‘제2의 벤처 붐’을 선언하고 정책펀드 확대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채택

- 정부는 벤처투자를 통해 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태펀드 출자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중기부 등 6개 부처에서 6,180억 원 출자, 1조 1,659억 원 조성 계획을 발표함(2018.2)
- 또한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와 벤처 투자·회수 시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수립하여 정책펀드인 ‘혁신모험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함
 -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첫 대책으로 내년부터 3년 간 30조원을 투자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혁신모험펀드의 주요 목표는 충분한 자금 공급과 민간부분의 유치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구성함

표 4. 혁신모험펀드의 4대 목표

목표	내용
충분한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10조원 펀드 조성 ·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한 ‘혁신창업펀드’ 및 ‘성장지원펀드’ 설치 · 2018년 중에 2.6조원 혁신 모험펀드를 1차 조성하여 신속 투자 · 혁신모험펀드 연계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공급
민간부분의 창의성·자율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분의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하는 출자사업 방식 확대 · 운용펀드 규모의 대형화 및 장기투자 적극 유도
모험성 강화 및 적극적 투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를 적극 유도 · 운용사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전환
운영 투명성 제고 및 펀드 간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투명성·연계성 강화 · 연계투자 활성화를 통해 정책펀드간 칸막이식 운영 해소

자료: 경제관계장관회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2018.1

해양 분야는 정책펀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 10개의 공적기관이 출자하고 있는 한국모태펀드에는 해양계정 부재

- 한국모태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2005년에 결성되어 약 20년간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펀드로서 펀드의 규모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3조 4,182억 원임
- 현재 10개의 공적 출자자가 제시한 지침에 맞추어 조성된 펀드자금을 총 13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한국벤처투자(주)⁶⁾가 운용하고 있음

- 10개 공적 출자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체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기부, 고용부, 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2017년 신규), 환경부(2017년 신규)
- 13개 계정 : 증진, 청년, 엔젤, 지방, 문화, 관광, 스포츠, 영화, 특허, 과기, 보건, 교육, 환경 등 13개 계정 운영
- 특히 교육부(총 160억 원 규모), 환경부(총 2,500억 원 규모)는 2017년에 신규로 출자에 참여하였음
- 그러나 한국모태펀드 내에 해양 분야에 주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정과 자금이 존재하지 않음

표 5. 한국모태펀드의 계정별 자금 현황

(2017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증진	청년	지방	엔젤	문화	과기 정통	영화	특허	보건	관광	스포츠	환경	교육	계
2005~ 2012	8,631	-	-	790	3,620	100	220	1,430	-	-	-	-	-	14,791
2013	325	-	-	500	300	-	100	-	200	-	-	-	-	1,425
2014	625	-	100	300	200	500	100	-	300	-	-	-	-	2,125
2015	1,520	-	-	500	541	500	100	170	300	130	200	-	-	3,961
2016	1,000	-	-	-	360	370	100	-	-	100	200	-	-	2,130
2017	5,000	3,300	-	-	530	200	180	-	-	150	70	200	120	9,750
계	17,101	3,300	100	2,090	5,551	1,670	800	1,600	800	380	470	200	120	34,182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한국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의 경우 주목적 분야에 대한 의무 투자 비율(약 60%)이 설정되어 있어 해양 분야 투자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

- 정책펀드는 목적에 맞게 펀드를 집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60% 내외의 주목적 투자 분야를 지정해 놓고 있어 해양 분야는 투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됨
- 주목적 투자 이외의 비목적 자율 투자(약 40%)는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투자처를 정할 수 있으나 IT, 바이오, 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투자자들은 해양 분야 전용펀드가 없어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IT, 바이오,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대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조언함
 - 해양산업의 특성 상 타 산업 대비 경쟁 열위에 있어 투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배제되고 있어 해양 분야 투자 활성화 계기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음

6)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액 출자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는 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임

■ 이러한 한계로 인해 벤처투자를 통해 지난 5년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해양기업은 22개로 전체 투자유치 기업의 0.4%에 불과

- 매년 5개 이하의 해양기업 만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으며, 5년간 누적 투자 유치액도 432억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투자자들은 해양 분야의 정보 부족과 함께 해양펀드 부재, 정부의 해양벤처 투자 관련 정책 부족, 해양기업의 투자 이해도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진단함

표 6. 해양기업의 투자유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전체 투자유치 기업 수 (개)	755	901	1,045	1,191	1,266	5,158
전체 투자유치액 (억원)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96,402
해양기업 수 (비중 %)	5(0.7)	4(0.4)	3(0.3)	5(0.4)	5(0.4)	22(0.4)
해양기업 투자유치액 (비중 %)	66(0.5)	157(1)	45(0.3)	120(0.6)	44(0.2)	432(0.4)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해양산업 선점을 위한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 가속화

■ 해양산업은 전체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고용증가율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OECD(2016)에 따르면, 세계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2010년 1조 5,019억 달러에서 2조 9,608억 달러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⁷⁾
- 특히 종사자 규모는 3,124만 명에서 4,052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고용증가율(27.5%)보다 해양산업의 고용증가율(29.7%)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해양수산부(2018)에서도 2030년 해양신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7년 대비 2.9배, 연평균 성장률은 8.5%로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⁸⁾

7) OECD, The Ocean Economy in 2030, 2016

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2018. 3

그림 2. 세계 해양신산업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2018

■ 고령화와 저출산, 자원고갈, 기술발전, 기후변화 등 글로벌 당면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해양의 가치와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

- (사회)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개인별 맞춤형 소비 증가로 식료품, 에너지, 건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
- (자원) 식량, 자원, 물 등 자원 부족으로 인해 심해저광물, 해양에너지, 해수자원 등 해양자원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해양과학기술 수준 향상으로 기술 기반의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환경) 기후변화와 해양재해, 안전사고 증가로 글로벌 규제와 함께 해양안전환경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표 7. 글로벌 당면 과제와 관련 해양산업





구분	현상	관련 해양 산업
사회 변화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개인별 맞춤형 소비 증가 식료품, 에너지, 레저 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요증가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첨단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자원 고갈	식량, 자원, 물 등 자원 부족 해양자원 개발 경쟁 심화	해저광물, 해수용존광물,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수담수, 해양심층수, 첨단수산양식,
기술 발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해양과학기술 수준 향상	해양에너지, 첨단해양장비, 첨단수산양식·가공
환경 변화	기후변화와 해양재해, 안전사고 증가 글로벌 규제 강화	해양에너지, 친환경선박, 해양CCS, BWTS, e-Navigation

자료 : 저자 작성

■ 이에 세계 각국은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을 수립

- (미국)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 NOC)는 ‘국가해양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경제 활성화를 5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함
- (영국) 2010년 ‘해양산업의 전략적 틀’을 통해 해양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최소 4% 증가, 매년 최소 1% 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일본) ‘제3차 해양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신산업의 부흥과 창출을 위해 해양에너지·자원개발의 촉진, 해양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해양산업 이용의 확대 등을 강조
- (중국)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2050’을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해양경제 기여도 50% 향상, 2050년까지 해양과학기술 수준 세계 3위를 목표로 제시함

표 8. 국가별 해양산업 성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해양정책 실행계획(National Ocean Policy Implementation Plan)’ 수립(2013), 5대 목표 제시 • 5대 목표 : ① 해양경제 활성화, ② 안전 및 안보 강화, ③ 해양의 건강성 증진, ④ 지역사회 지원, ⑤ 과학의 발전 및 정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산업의 전략적 틀(Marine Industries Strategic Framework)’ 수립(2010), 2020년까지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5대 목표 제시 • 5대 목표 : ① 연평균 성장률 최소 4% 증가, ② 매년 최소 1% 노동생산성 증가, ③ R&D, 마케팅, 교육훈련 등 질적 향상, ④ 해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⑤ 부처간,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기본법에 의거 해양 관련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해양기본계획’ 수립 (2008년 1차, 2013년 2차, 2018년 3차) • 3차 계획 : 해양신산업의 부흥과 창출을 위해 해양에너지·자원개발의 촉진, 해양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해양산업 이용의 확대 등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2050’(2010)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해양자원 이용, 해양의 건강성과 안전, 해양력 강화를 위한 R&D 전략 제시 • 해양과학기술의 해양경제 기여도 50% 향상, 2050년까지 해양과학기술 수준 세계 3위를 목표로 제시

자료: 각국의 해양전략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또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해양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

-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펀드를 운영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제공하며 10~20건의 프로젝트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약 1억 달러를 배정함
- (싱가포르) 항만공사에서 해양기술 클러스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싱가포르 달러(S\$) 규모의 해양혁신펀드(MINT 펀드)를 조성함
- (노르웨이) 2019년부터 해양산업 부문의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약 4,000만 크로나는 해양기술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에 지정될 예정임

표 9. 주요 국가의 해양산업 펀드 사례

국가	기금조성기관	해당내용
	미국 국제 개발처 (USA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해양투자를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Althelia Sustainable Ocean Fund(SOF)를 운영 SOF는 10~20건의 프로젝트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약 1억 달러를 배정
	싱가포르 항만공사 (M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기술 클러스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싱가포르 달러(S\$) 규모의 해양혁신펀드(MINT 펀드)를 조성 지역 해양기업 지원 및 R&D를 통한 혁신 강화, 경쟁우위 개발을 위한 싱가포르 해양기술 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함
	연구협의회 (The Research Council of Nor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ROFF 프로그램은 해양산업 부문의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으로 2019년부터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최대 4년 동안 펀딩을 신청 가능 약 4,000만 크로나는 해양기술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에 지정될 예정

자료 :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정리

우리의 해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한진해운의 여파로 최근 국내 해양산업은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진 상황

- 2016년 해양산업 사업체 수는 총 1만 7,854개로 전년 대비 531개(2.9%) 사업체가 감소하였으며, 매출액은 116조 8,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9,302억 원(7.8%) 감소함
- 또한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수는 27만 1,618명으로 2015년 29만 6,159명에 비해 2만 4,541명(8.3%) 감소하였음
-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항만 분야의 사업체, 매출액, 상용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해양산업 전반의 침체를 주도함

표 10. 국내 해양산업 현황

구분	사업체(개)	매출액(억 원)	상용근로자(명)
2015	18,385	1,268,239	296,159
2016	17,854	1,168,937	271,618
증감	-531	-99,302	-24,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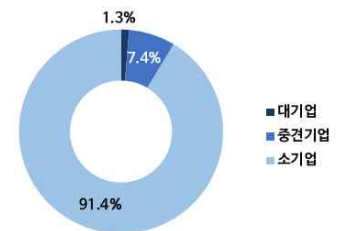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2016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보고서, 2018

■ 해양산업 사업체의 영세성과 창업 부진은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전체 해양산업 사업체 중 대기업이 1.3%, 중견기업이 7.4%, 소기업이 91.4%로 대다수의 해양산업 사업체가 영세함

표 11. 해양산업의 규모별 사업체 현황

구분	사업체 수(개)
대기업	225
중견기업	1,317
소기업	16,312



자료 : 해양수산부, 2016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보고서, 2018

- 2015년 말 기준 전 산업 사업체 중 7년 미만의 창업사업체 비중은 51.7%이나 해양 분야 창업사업체는 33.3% 수준에 불과함
- 2007~2015년 동안 해양 분야에서 연평균 874개의 업체가 창업을 하였으며, 2007년 이후 창업사업체 수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5년에는 급감하여 223개에 그침(수산 분야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833개의 업체가 창업하였음)

표 12. 전 산업 및 해양산업의 창업사업체 수 비교(2015년 말 기준)

	총 사업체 수(a) (개)	창업사업체 수(b) (개)	비중(b/a) (%)
전 산업(A)	3,874,167	2,001,674	51.7
해양산업(B)	18,385	6,130	33.3
비중(B/A)	0.47	0.31	

자료 : 통계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해양기업들은 자금의 대부분을 자체 자금 및 대출에 의존

- 500개 해양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금조달 출처 중 자체 자금 비중이 74.4%로 가장 높은 반면, 민간 자금과 정부 정책 자금은 1.1%, 5.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은행 대출은 18.3%를 차지하나 이마저도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

표 13. 해양기업의 자금 조달 출처

(단위 : %)					
자체 자금	은행 대출	정부 정책 자금	민간 자금	기타	합계
74.4	18.3	5.0	1.1	1.2	100.0

자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 분야 정책펀드 조성 관련 조선해양기업 수요조사 결과, 2018

투자자와 해양기업체 모두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 요구

■ 해양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이 꼭 필요함을 강조

- 전용펀드의 부재를 이유로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들의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해양수산투자기관협의회 결성을 계기로 해양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18개 벤처투자회사를 중심으로 2017년 8월에 해양수산투자기관협의회를 결성함
- 그동안 IT, 바이오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17년 8월 개최한 ‘해양수산 투자유치설명회’와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행선박, 생선 필렛(fillet), 수중작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7개 기업에 약 84억 원의 투자유치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함
 - 또한 2017년 10월 투자자의 해양기업 현장방문 행사에서 6개 기업 중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의향이 있었고 1개 기업은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음
- 투자자들은 해양 분야 전용펀드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설령 투자하고 싶어도 주목적 사업으로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펀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해양펀드가 조성된다면 자펀드 결성 및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VC가 증가함

■ 해양기업들 역시 펀드를 통해 투자유치를 받고 싶다는 입장 표명

- 500개 해양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양사업체의 40%가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전체 해양사업체가 1만 8,754개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 시 7,141개 사업체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투자유치 희망기업 조사에서도 73개 응답기업의 투자수요가 평균 22억 7,100만원, 총 투자수요는 1,658억 원에 달함
 - 단순 계산 시 전체 해양기업의 총 투자수요는 약 6조 원에 달함

■ 해양수산부도 전용펀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420억 원 규모의 해양펀드 조성 추진

-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건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1,420억 원(정부출자 매년 200억 원/5년)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 중임

- (주)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 내에 해양계정을 신설하고, 2020년까지 정부 1,000억 원, 민간 420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임
- 특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용펀드를 신설해 해양 분야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음

표 14. 해양모태펀드 조성계획

구분	주요 내용
조성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 내 해양계정 신설 • 2023년까지 총 1,420억 원(정부 1,000억+민간 420억) 규모로 조성
재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 동안('19~'23) 매년 2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출자하며, 민간에서는 출자비율(30%)에 따라 약 420억 원 규모의 재원 유치
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모태펀드 투자조합의 운용기간은 30년, 자(子)펀드의 존속기간은 8~10년(투자 4~5년, 회수 4~5년)으로 설정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목적 투자 대상은 '해양수산 신산업로드맵'에 따른 신산업 분야 및 첨단 기술 융합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선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운용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의 의무 투자 비율은 60%로 설정하고 비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해양 분야 전용펀드는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의 주춧돌

■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운과 항만은 무역대국의 인프라로, 수산은 국민먹거리와 일자리 공급처로, 해양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경제발전 견인

- 육로가 막힌 상황에서 국내 해운은 우리나라 국제화물의 99.7%를 처리하며 2016년 기준 국내 8위의 수출산업이자 세계 6위 무역대국의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 항만은 2016년 기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7%인 2,601만 TEU를 국내 항만에서 처리하며, 부산, 인천, 광양, 울산, 평택 등 항만 도시경제를 견인함
- 수산물의 연간 식용 공급량은 주요 식품군 중 1위로서 육류의 공급량마저 추월하였으며, 2015년 기준 약 104만개의 수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해수욕장 방문객 1억 328만 명, 크루즈 관광객 195만 명 등 해양관광 활동으로 인해 부산, 인천, 제주 등 해양관광도시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함

■ 해양벤처 육성과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의 정책펀드가 반드시 필요

- 해양산업 육성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양벤처를 육성해야 하며, 특히 해양신산업은 아직까지 세계 시장을 선점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따라잡기’에서 ‘뛰어넘기’로 전환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2008년 45%에서 2015년 80% 수준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평가되며, 세계 최고 또는 최초로 해당하는 9대 선도가 기술을 확보하였음
-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내 해양기업들이 자금 걱정을 덜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해양 분야 전용 정책펀드 조성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임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병!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URL: <https://www.kmi.re.kr/>